



3면

3차 공판만에 처음 모습 드러낸 이상직 의원, 혐의 전면 부인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0년 11월 30일 월요일 (음 10월 16일) 제266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새만금 해양수산 사업발굴 가속

전북도, 협의체 첫 회의... 전북형 뉴딜 성공추진 고심 정부의 뉴딜동향 공유, 실행력 확보방안 등 대책 논의

전북도가 지난 27일 '전북형 뉴딜 새만금 해양수산분야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도는 한국판 뉴딜사업과 전북형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새만금 해양수산분야 학계, 유관기관, 전북연구원 등 전문가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책여건에 맞는 사업발굴과 후속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는 양오봉 전북대 교수, 윤동욱 새만금해양수산국장 등이 참석해 정부의 뉴딜동향과 전북형 뉴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기존에 발굴된 사업의 실행력 확보방안과 중장기적 보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전북연구원 김재구 연구위원은 최근 SK의 새만금 데이터센터 설립 투자협약 체결을 계기로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 여건을 확보된 것에 맞춰 '새만금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 중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새만금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은 신재생에너지와 데이터 산업을 융합한 형태로 신기술 전력망 구축, 규제자유특구 지정, 데이터센터 핵심 장비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정부 정책에도 부합해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된다.

또한,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기존에 발굴된 사업들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함께 추가로 정부 정책방향과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발굴을 위한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 정부의 지역균형 뉴딜동향을 수시로 공유하기로 했다.

윤동욱 전북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전북연구원, 유관기관, 관내 대학 등과 공조해 지역뉴딜 사업을 추가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에 포함시킬 계획

이다"면서 "새만금해양수산 분야 뉴딜 협의체를 통해 전북형 뉴딜과 연계, 이미 발굴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해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형 K-뉴딜, 무엇을 어떻게?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K-뉴딜 위원회 종합토론회가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최명규 전주부시장 긴급 간담회 자율점검 강화 적극 협조 당부

전국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를 연속 500명을 넘는 등 상황이 악화되자 전주시가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 관계자들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최명규 전주부시장은 지난 27일 유흥시설과 방문판매업 등 고위험시설 업종별 협회 대표자와 시 방역담당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고위험

시설 관련 협회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긴급 간담회에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일반음식점, PC방 학원, 카페, 제과점 등 고위험시설 업종별 대표자가 참석했다. 최명규 부시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주시시키면서 업종별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자율점검을 강화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 행정에서 진행할 고강도 방역다속 점검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될 경우 달라지는 강화된 수칙들을 설

명하면서 한 번이라도 위반이 적발되면 바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일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고위험시설 대표자들은 "코로나19로부터 더 큰 위기를 막기 위해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고위험시설 외에 종교계에도 주말 방역수칙 준수 협조를 당부하면서 특별점검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되면 100인 이상의 각종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또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율리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이 금지되며,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까지

문을 열 수 있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엔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카페는 영업시간 내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다.

최명규 전주부시장은 "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주말 확진자 발생 추이를 지켜보고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을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에서는 자발적으로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임금 체불 이주노동자 정부가 나서 보호해야”

전주시 인권위원회 워크숍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에게 정부가 먼저 체불금액을 지급하고 이후 고용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시와 전주시 인권위원회(위원장 신옥주)는 지난 27일 현대해상 8층 회의실에서 이주민 인권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와 관련 전문가, 이주민 당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주노동자 인권증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다문화 시대, 이주민 인권의 실태를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숍은 이주노동자의 인권정책과 인권침해 사례 등의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에서 원곡법률사무소의 최정규 변호사는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는 정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최 변호사는 "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에 대해 정부는 내국인 노동자보다 더 강력한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에게 체불금액을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전액채담금' 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이찬 노동상담활동가는 "고용주를 알선한 고용노동부가 체불임

금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주노동자에게 선지급한 뒤 체불고용주로부터 구상받아야 하며,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자에게 이주노동자를 알선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샌드위치 패널이나 컨테이너 등 불법 시설물이 아닌 합법적인 주택만을 기숙사로 제공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호철 성요셉노동자집 사무국장은 "노동시간, 임금과 관련한 불법과 인권유린이 만연해 있다"면서 "먹고 지는 문제는 이주노동자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가장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문제인 만큼 행정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 참석자들은 이주노동 당사자로부터 직접 관련 사례를 들으면서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영상을 시청하기도 했다.

신옥주 위원장은 "이주민과 관련된 법과 정책이 인권을 기반으로 한 실효성 있는 인권정책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면서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병용 전주시 인권담당관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넘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문가들과 힘을 모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새만금개발청, 한일경제인회의서 투자유치 홍보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지난 27일 JW 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주최: 한일·일한경제협회)에 참가해 새만금 투자유치 홍보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한일경제인회의는 양국 경제계의 상호 이해와 무역·투자협력 등을 위해 1969년부터 매년 교대로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행사는 한국과 일본을 온라인으로 연결한 웹(Web) 회의로, 서울과

동경의 회의장에 양국의 기업 최고경영자 및 임원 등이 참석했다.

새만금청은 행사장 내 홍보물 전시를 통해 새만금의 모빌리티(신교통) 융복합 그린수소 생산·재생에너지 등 주요 클러스터(협력지구) 추진 현황과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등 핵심 사업현황을 소개했다. 또한, 교류회에 참석해 새만금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을 상대로 투자환경과 다양한 투자혜택 등을 설명했다. /유호상 기자








높을 표 고 창

High Gochang

고창

고창군 농특산물 통합브랜드